

【 주간포커스 】

EU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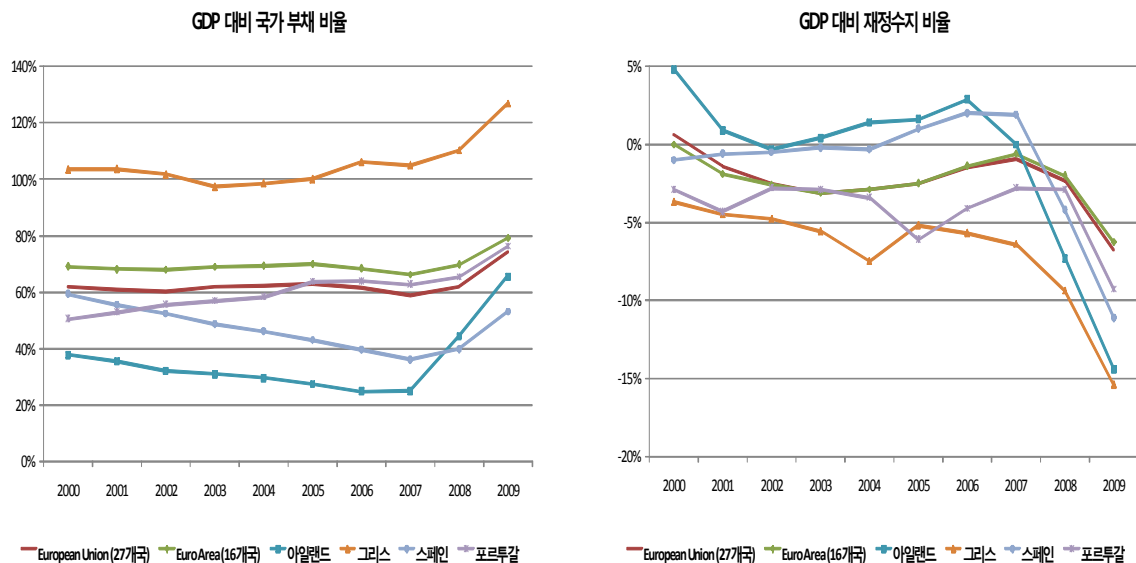
김동겸 선임연구원

EU는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한시적 운영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구(EFSF)를 대체할 유럽안정제도(ESM) 도입에 합의하였다. ESM은 EU 회원국에 구제금융이 제공될 때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정안정제도이다. EU의 재정위기는 ESM의 도입을 통해 일시적으로 확산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세계경제의 잠재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.

- 그리스를 시작으로 촉발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,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제기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진행형이며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
 - 그리스가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채 상환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작년 5월 EU와 IMF으로 부터 1,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음.
 - 또한 EU와 IMF는 아일랜드에 대한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안(2010.11.28)을 승인하였음.
 - EU와 IMF는 아일랜드에 대해 각각 450억 유로와 225억 유로를 지원하고 아일랜드 정부가 175억 유로를 조달할 계획
 - 지난 12월 신용평가기관 중의 하나인 무디스가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
-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의 증가, 단일통화 사용으로 인한 제약 등이 지적되어 왔음.
 -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부실 은행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 집행 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
 -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크게 악화되어 2009년에는 15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.

- 또한, 1999년 단일통화인 유로화가 도입됨에 회원국들은 독립적인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을 시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외불균형 해소가 어려워짐.
 - 자국 화폐가 이용되는 경우 환율의 평가절하를 통해 대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나, 단일 통화 사용으로 EU 회원국들은 국가채무, 경상수지 조정이 어려워져 회원국 간 불균형 현상이 지속

<그림 1> 유럽 주요 국가의 재정현황



자료: Eurostat

- EU 회원국들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과정에서 재정위기가 타 국가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럽재정안정기구(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: EFSF)를 설립
 - EFSF의 경우 유로 국가들의 지급보증 4,400억 유로, EU 예산에서 책정되는 긴급자금 600억 유로, IMF의 출연금 2,500억 유로 등 그 규모가 총 7,500억 유로에 달함.
- 최근에는 유럽의 금융안정망 구축을 위한 상설 위기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유럽연합 정상들은 재무장관회의(2010.12.17)에서 한시적 운영기구인 EFSF를 대체할 유럽안정제도(European Stability Mechanism: ESM)에 대한 합의를 도출¹⁾

1) European Council(2010), European Council 16-17 December 2010 Conclusions.

- ESM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구제금융이 제공될 때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정안정제도로써,
- 회원국들의 보증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한다는 점에서 EFSF와 유사하나, 2013년 7월 이후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 집단채무재조정(Collective Action Clauses: CACs) 조항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.
 - 집단채무재조정 조항 신설을 통해 해당 국채를 보유한 민간투자자가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게 됨.

□ 그 밖에도 유럽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구제금융 확충, ECB의 국채 매입, 유럽공동채권(Euro-bond) 발행²⁾ 등이 제안되었으나,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합의 도출에는 실패

-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발생할 경우, 현재 조성된 유럽재정안정기금로는 이를 총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MF 및 유럽공동체위원회(EC)는 효과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금 증액 필요성을 제시³⁾
 - 특히, 스페인의 경우 구제금융 지원 시 그 규모가 4,09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⁴⁾, EU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분담금(523억 유로)을 부담하고 있어 그 영향이 EU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평가
- 한편, 이탈리아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유럽공동채권 발행을 제안하였으나⁵⁾, 그 혜택이 재정 건전성이 낮은 회원국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채 조달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일과 프랑스 등의 반대에 부딪히게 됨.

□ EU의 재정위기는 ESM의 도입을 통해 일시적으로 확산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세계경제의 잠재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

- EU 회원국들의 국가부채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, 안정기금 확충, 유럽공동채권 발행 등에 관한 논의가 재부각될 가능성 존재.
- 또한, EU 회원국들이 재정 건전화화를 위한 재정긴축을 시행할 경우 세계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으며, 남유럽 국가의 재정부실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대외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. KiRi

2) Thomas and Francois(2010), Beyond Maastricht: A New Deal for the Eurozone,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
 3) The Telegraph, "IMF urges EU to boost €500bn bail-out fund to stem crisis", 06 December 2010
<http://www.openeurope.org.uk/media-centre/summary.aspx?id=1245>
 4) <http://www.openeurope.org.uk/media-centre/summary.aspx?id=1245>
 5) Financial Times, "E-bonds would end the crisis", 05 December 2010